

## 大學危機 논의, 무엇이 問題인가

朴 洪 圭  
(嶺南大 公法學科)

---

요즈음 대학과 교수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일고 있다. 大學의 危機는 교육이념의 부재, 사회비판 기능의 상실, 운영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되며, 연구·교육·사회봉사라고 하는 대학의 책임이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위기이며 그것을 어떻게 克服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다.

---

### 1. 최근의 몇 가지 論議

지난 4월 24일 서울대에서 ‘한국 대학의 실상과 반성’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 大學의 危機는 교육이념의 부재, 사회비판 기능의 상실과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되며, 연구·교육·사회봉사라고 하는 대학의 책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방만한 자율에서 탈피하여 교수들의 교육적 의무와 책임을 묻는 상호평가와 견제가 필요하며, 외국 학문의 무분별한 수입이 지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되었다. 한편, 『신동아』 5월호는 “한국의 대학교수, 무경쟁왕국의 군주들”이라고 하는 글에서 敎授의 나태와 풍요를 비판했다. 교수의 평균월급은 2백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신동아』는 그것이 교수의 하는 일에 비해 과도

하다고 보는 듯하다. 외국에 비해 수업량은 과도하나 연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교수의 역·저서는 1년에 1인당 0.2권, 논문은 1편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갓 창간된 『교수신문』은 언론인이나 기업인에 비해 교수의 월급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대학과 교수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월주의가 느껴지고 같은 교수로부터 공연히 꾸증을 들은 듯하여 불쾌하기도 하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라면 누구라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수긍할 것이다. 『신동아』의 지적은 마땅히 들어야 할 꾸증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아마도 양심이 없는 철면피이리라.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기이며,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다. 예컨대 相互評價와 牽制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누가 누

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서울대 교수가 지방대 교수를 평가한다는 것인가? 어떤 나라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학문 자체의 서양화의 경우, 그것은 대학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즉, 대학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본質的 問題이다.

또한 대학위기의 논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위 교권이냐 학생들의 학습권 주장 또는 학사행정예의 참여문제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배제하고 이루어져도 좋은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점들은 시사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으므로 일부러 회피된 것인지는 모르나, 서울대 교수들의 논의는 추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듯하여 상당히 아쉽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한편, 월급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 만큼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 월급이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것은 사실이고, 같은 교육자인 교사들의 그것에 비해서도 월동 높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대학에서의 같은 교육자인 시간강사의 수입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이란 원칙이 대학에서만큼 지켜지지 않는 곳이 또 있을까? 나는 대학교수가 고임금자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학력은 고임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른 나라처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면 그 직업,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적절한 임금을 평등하게 받는 것이 社會正義라고 생각한다.

## 2. 民主主義 社會의 大學

나는 사실 서울대 교수들의 고답적인 세 가지 비판에 대해 별 할말이 없다. 그러나 대학에만 어떤 특별한 敎育理念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교육법은 우리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

학이 사회를 어떻게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이념은 民主主義이다. 그것 외에 대학에 무슨 특별한 이념이나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한때 대학이념론이 지식인론과 함께 난무한 시절이 있었고 그것에 공감하기도 했으나 요즘엔 그것들이 공소하게만 생각된다. 10년 넘게 대학에서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태한 대학인이 된 탓이리라. 그러나 나는 4·19 이후 우리 대학의 학생운동이나 교수들의 여러 가지 社會參與가 우리의 민주화에 지대하게 공헌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그들은(언제나 소수이기는 마찬가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녔으며 사회비판에 일정한 기능을 했다고 본다. 대학이 그 정도의 역할이라도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어느 나라의 어떤 교수나 학생에게도 우리 대학의 이러한 점을 자랑한 적이 있다. 지독한 천민자본주의의 나라에서 우리의 대학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어 온 것은 차라리 기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자랑스럽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대학의 非民主性과 교수의 나태'이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비민주적인 풍토 속에서 무사안일이 족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우선 職業倫理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교수가 지식상인이라는 말을 곱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수의 임무는 성실한 강의와 연구이다. 그 대가로 교수는 월급을 받는다. 학부모는 돈을 내고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요구한다. 직접적 수익자인 학생은 잘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인 學習權이다. 반면에 교수는 그들을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교수는 마땅히 쫓겨나야 한다. 학생에게는 그러한 교수를 쫓아낼 권리가 있고 유능한 교수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전제로서 학생은 교수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학생은 교수의 교육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교수의 교육이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하의 의무이다.

### 3. 敎權과 民主化

학생들의 학습권 주장에 대하여 교수들은 심심찮게 敎權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것이 교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교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무슨 전가의 보도인 양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교권을 교수의 權利라고 보는 경우, 교수에게 敎育상의 권리 이외에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정치활동이나 노동조합 또는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도 교수만의 특권은 아니다. 그것이 교수에게 인정됨은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그것을 행사하면 쫓겨난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惡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악법 하에서도 교수에게는 特權이 인정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수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교권이라고 주장한다면 쫓겨난 교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교수는 교수를 뽑을 권리를 교권의 차원에서 주장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수의 人罪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인사는 모든 교용이 그러하듯 원칙적으로 使用者의 권리이다. 학생들은 물론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나 교수급여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학생의 부모이고, 그들은 대학당국에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위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은 그로 인한 수익자이다. 사용자가 교수의 노동에 대해 제공하는 임금은 사실 학부모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그 實質的 受益者인 학생이 교수의 인사에 개입함은 당연하다. 최소한 어떤 교수가 어떻게 뽑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교수의 인사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교수이다. 그들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규채용자의 質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이다. 인간성 운운하며 즉별적인 인간관계에 사로잡힌 교수들만의

密室人事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비민주적인 것이다.

교권을 교수의 權威라고 하는 경우,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히 이해할 수 없다. 교수의 권위는 교수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곧 우선 학생들이 평가할 문제이다. 학생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 권위란 있을 수 없다. 비판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권위는 그 부여자에 의해 이미 실추되었는데, 그것을 교수 스스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그것은 철면피한 것이다. 만에 하나 君師父 일체 따위를 읊조리는 교수가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친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고려장시대의 시대착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수의 社會的 權威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하는 일에 비하여 월급도 높고 사회적 권위까지도 부여받고 있다. 교수였던 관리가 밀가루를 뒤집어 썼다고 하여 또는 그 사진을 학생들이 밟았다고 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우리 한국이다. 그것이 폭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책임으로 다루어지면 충분한 것일텐데 소위 교권의 침해로 논의되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 학생이 차선시비로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고 하여 단순폭행이 아니라 학생의 사치와 무례함이 신문방송에 떠들썩해지는 곳이 한국이다.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일반인과 그런 시비를 하면 뉴스가 아니나 교수와의 일이어서 뉴스가 되는 나라이다. 교수의 자가용은 문제가 아니고 학생의 자가용은 사치로 매도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교수를 이렇게 존경하는 학생과 국민을 다른 어떤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교수의 엄청난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권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수가 존경받는 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만에 하나 封建的 遺習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문제이다. 기존의 봉건적 권위가 파괴된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총장직선이 아니라 교수의 봉건적 권위를 否定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직업과는 달

리 교수만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직업인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교수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4. 敎權과 授業

나는 참된 교권의 문제는 講義와 研究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수의 권리이든 권위이든간에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학의 강의에는 무슨 원칙이 없다. 교수는 국민학교 교사도 배우는 교육학에 대한 아무런 기초도 없이 강의에 임한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내 나름으로 생각한 敎授의 職分 내지 職業倫理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첫째, 교수는 다른 모든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직장인 학교에 나와 있어야 한다. 나는 강의시간에만 학교에 나오는 교수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외국의 세계적인 원로교수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研究室를 지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강의시간에만 학교에 나오거나 반 년 이상의 방학 동안 집에서 쉬는 것은 교수의 특권도 귀찮도 아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나태일 뿐이다. 교수는 언제나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언제나 그들의 질문과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항상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면 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授業時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강은 있을 수 없다. 학생의 요구에 의한 휴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는 엄격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는 그것이 진정한 교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학생의 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수업일수는 세계적으로 짧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의 반 년 정도의 수업일수를 외국처럼 9개월 정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교수의 수업준수도 자율적인 차원에서 통제될 수 없다면 법으로 제도화하여 직무유기로 다스

려야 한다.

셋째, 교수는 수강신청 전에 강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세한 計劃圖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학에 필수과목이란 있을 수 없다. 강의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교수는 그 학문에 관한 모든 문헌에 통달하여 성실하게 강의하여야 한다. 적어도 국내의 기본문헌, 특히 최신문헌은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소개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는 學生의 水準에 맞게 강의과목의 기본적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그 과목의 연구에 길잡이가 되도록 강의하여야 한다. 교수는 담당과목의 일부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특별한 연구주제나 박사논문 따위를 강의해서도 안 된다. 수업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학생이 학문을 연구하거나 직업인이 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과목의 전체윤곽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강의는 재미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그 학문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교과서를 읽거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거나 외우거나 받아적게 하는 수업이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敎科目은 항상 변화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요구, 특히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교과목이 계속 개설되어야 한다. 대학개혁의 기본은 그러한 커리큘럼의 변혁에 있어야 한다. 나는 특히 무미건조한 교양과정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나 고교수업의 再版같은 지금의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각 전공과목에 맞는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교양이 되는 학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법학과의 경우 국어 대신 법과 문학 또는 법률문장론, 영어 대신 법률영어, 철학이나 국민윤리(최근 그 이름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대신 법과 윤리 또는 법과 사상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여섯째, 受講生은 최대 백 명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강의를 인간적인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 교수는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정한 자격이나 성적이 안 되는 경우, 교

수는 가차없이 수강신청을 받지 않고 낙제를 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교수에 의한 자의적인 절대평가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일곱째, 강의내용과 성적평가는 반드시 학생들의 評價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험성적은 반드시 공개되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는 그 기준이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구체적인 수업의 평가 주체는 그것을 직접 듣는 학생뿐이다.

여덟째, 교수는 研究의 結果를 강의하고 나서 그것을 학계와 일반에 발표하여야 한다. 교수의 질 문제는 결국 발표의 양과 질로 따질 수밖에 없다. 그 質은 공개토론을 통하여 평가될 것이지 동료인 교수 사이에서 평가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양이 문제될 것이다. 최소한 1년에 논문 한 편도 쓰지 않고 평생 책 한 권 내지 않는 교수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하면 그것은 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 5. 大學의 民主化

나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個性을 지녀야 한다

고 믿는다. 예컨대 내가 근무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원 중심의 학문연구가 아니라 대학 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속적인 학문연구보다는 취업을 원한다. 학과정원에 묶여 관심이 없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취업전선에 대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학 현실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신적인 노예상태에 있다.

大學의 民主化는 학생들이 학과와 학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 그 진면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의 복지시설에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대학에서 자유와 평등을 배우고 실현하여야 한다. 그것이 대학민주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의 민주화는 교수와 학생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정당한 相互批判 위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학생들은 정당하게 요구하고 교수들도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師弟關係는 상호불신을 얻는 공정한 비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위기는 그것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